

5·18 사적지 불타고 파손되고 … 5년째 폐허

## 옛 기무부대 부지 이대로 둘건가

국방부 반대 역사공원 조성 지지부진…우범지대 전략

대표적인 5·18 사적지인 광주시 서구 쌍촌동 옛 광주기무부대(505보안대)의 일부 건물이 불타고, 파손된 채 도심 속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05년 광주기무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광주시가 국방부로부터 쌍촌동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려 했으나, 국방부가 이에 반대하면서 5년 넘게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오후 찾은 옛 광주기무부대 정문은 출입이나 경작을 금지하는 경고문만 걸려있었고 뿐 관리인이나 통제시설이 전혀 없어 아무나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했다. 기무부대 내 단련장은 나무가 모두 뽑힌 채 주민들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본부·강당·관사·행정동 등 건물들은 화재나 파손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불에 탄 건물들은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모든 건물의 유리창이나 출입문, 지붕 등 성한 곳이라곤 찾을 수 없었다. 이 건물들은 1980년 5·18 당시 기무부대원들이 민주인사와 5·18 학생 지도부를 감금·고문했던 역사의 현장이며 당시 신군부의 현장 지휘장소로도 사용된 곳이다. 5·18 사적지에 대해서는 원형 보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국방부의 5년 이상 계속된 무상양여 논의 속에 사적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옛 광주기무부대 인근에 사는 박모(45)씨는 “5·18 사적지라는 데 관리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하는 기관도 없어 서서히 도심 속 우범지역이 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모(50)씨는 “2일 오후 초등학생인 아들이 옛 기무부대 앞에서 낭치당할뻔 했다”며 “공원으로 서둘러 조성하든지, 관리라도 제대로 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옛 광주기무부대 터 3만5천 149㎡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단체와 환경단체의 제안에 따라 이 부지를 5·18의 교훈을 일깨우는 교육마당과 휴식공간으로 꾸밀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에서 감정평가액이 170억원에 이르는 이 부지의 무상양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에 5년 무상사용, 5년 분할상환 등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이 부지는 국방부특별회계에 포함돼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5·18 사적지인가는 하지 만 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허연식(47) 5·18민주유공자단체 통합추진위 간사는 “옛 기무부대의 모습은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5·18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5·18 사적지 등 유형적 기념사업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후 조성이나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5·18 사적지인 옛 광주기무부대 내부 건물이 불에 타고 파손된 채 5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 건물은 80년 5·18 당시 신군부의 지휘본부가 있었으며, 민주인사와 학생 지도부가 감금돼 고문을 받았던 곳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목포지역 25개 중·고

## 교복 공동 구매 결정

### 최저가 업체 선정

목포지역 30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 구매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는 3일 목포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30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제일중, 유달중 등 25개 학교가 올 신입생 하복부터 교복을 공동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목포여중, 목포고 등 나머지 5개 학교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목포시 교복연합회와의 간담회

회에서 교복의 공동구매는 최저가 낙찰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공개 입찰과 목포지역 업체로 제한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6~7년 전부터 학부모들의 교복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된 교복 공동구매가 교장단, 운영위원회, 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오는 4월에 실시방안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진위가 지난해 8~9월 목포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 1천18명을 대상으로 교복 공동 구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4%가 공동 구매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에어컨 제공 농협 조합장 입간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 가입된 봉사단체에 물품을 제공한 전남 모 농협조합장 B(59)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지난해 7월 한 봉사단체에 7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前 북구의원 농로 막고 “통행 못 해”

**성나팔** ○전직 구의원 이 자신의 눈에 만 들어진 농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눈총’.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북구의회 의원 정모(63)씨는 지난달 12일 광주시 북구 장동동 자신의 눈에 있는 폭 2m의 농로에 높이 1m의 흙더미와 철조망을 쌓아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

○“문제의 농로는 정씨가 10여년 전 자신의 눈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만들었는데, 주민들은 ‘길을 막으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며 한숨.”

○“주민들의 항의에 ‘임시로 6개 월만 통행 제한을 풀기로 했다’는 정씨는 ‘우회도로가 있는 데 굳이 눈 가운데 있는 농로로 통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양 동호안 둑 붕괴 사고

## 금품수수 감리책임자 구속

### 관리업체 대표 영장

검찰이 지난해 8월 발생한 ‘광양 동호안 둑 붕괴 사고’와 관련, 인근 폐기물처리장 공사의 감리책임자를 구속하고 폐기물처리장 관리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동호안 둑 인근 폐기물처리장의 공사 감리를 맡은 모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정모(48)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폐기물처리장 공사 당시 설계 및 감리를 맡으면서 설계비를 적정 비용보다 높은 7억원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쟁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사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고가의 설계비를 건넨 관리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국지반공학회의 동호안 둑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매립장 안전을 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자 공사 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동호안 둑 붕괴 사고’는 지난해 8월 23일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쌓은 재방 200여m가 바다 쪽으로 4~5m씩 밀려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제방과 도로 곳곳이 붕괴돼 폐기물을 처리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동부취재본부=한태민기자 hagija@

### 작업 중 질식사 강모씨 유족

### “현대삼호重에 보상금 청구”

전국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3일 “지난달 25일 작업 중 질식사한 강모(42)씨의 장례와 관련, 강씨의 유족이 회사의 책임을 묻고 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또 “4일 오전 사측과 긴급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를 열 계획”이라며 “이 자리에서 산업체에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후 대책안,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사고 긴급구조작업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후 3시20분께 영암군 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연삭 기로 선박 불력 내부 마감 작업을 하던 강모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 목포 중앙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軍 의문사’ 허원근 일병 26년만에 타살 규명

진도출신…법원 “유족에 9억2천만원 지급하라”

대표적인 군(軍) 의문사 중 하나인 진도 출신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이 26년에 의한 것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홍준)는 3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고,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후 의문사라는 진상 규명 활동을 벌여 2002년 ‘허씨가 타살됐

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단은 자체 조사를 벌여 ‘허 일병이 중대장 전령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했으며 의문사의 조사 결과는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허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70)씨는 “우리 아들같이 어울한 죽음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반역자가 되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가는 계속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2010년도 제18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보건복지부 교육기관

보건복지부 교육기관